

코로나19 위기: 미국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 및 정책대응

Susan N. Houseman (미국 W.E. 업존고용연구소 부소장 겸 연구본부장)

■ 코로나19가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

의무휴업이 확산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시되면서 미국에서는 3월 이후 전례 없는 고용 감소와 실업 증가가 발생했다. 미국의 공식 실업통계는 월별 가구조사(household survey)를 기반으로 한다. 이 통계는 매월 초에 발표되며 전월 중순(특히 전월의 12일이 포함되어 있는 주)의 실업 상황을 반영한다. 이와 별도로 고용주 설문조사(employer survey)는 임금고용(payroll employment) 동향을 추적한다. 미국 노동통계국(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이하 BLS)에 따르면, 2020년 공식 실업률은 4월 중순 기준으로 14.7%이며, 이는 1930년대 대공황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BLS, 2020). 면담자들이 조사 주간에 직장에 출근하지 않은 개인들의 코드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문제들을 감안할 경우, BLS는 실업률이 최대 5%p 더 높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16세 이상 인구의 고용률(employment-to-population ratio)은 51.3%로, 이는 1948년 1월 이 통계가 작성된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영업 개시에 대한 규제완화가 반영되어 고용 상황은 4~6월에 다소 개선되었다. 공식 실업률은 3.6%p 감소하여 11.1%를 기록하였고, 고용률은 3.3%p 증가하여 54.6%를 기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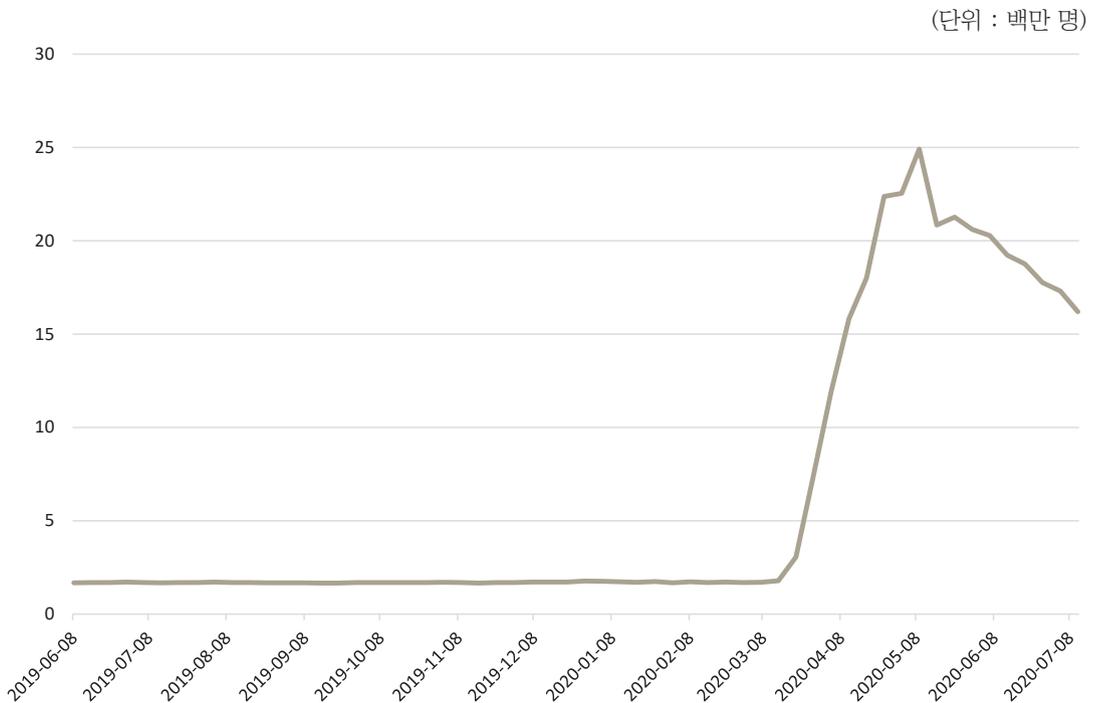
* 이 글은 독일 본에 위치한 IZA 노동경제연구소(IZA Institute of Labor Economics)가 수행한 코로나 19 위기대응 모니터링(COVID-10 Crisis Response Monitoring, <https://covid-19.iza.org>)을 위해 작성한 영어 원고를 번역한 것이다.

BLS는 실업률의 과소측정 가능성을 계속해서 문제점으로 지적해 왔다.

매주 발표되는 실업보험 행정자료(administrative data on unemployment insurance) 역시 현 위기 동안 실업이 급증했음을 보여준다(DOL, 2020). [그림 1]은 과거 임금근로자 중 지난 일 년간 실업급여를 수급하게 된 이들의 수를 보여준다. 이 수치는 3월 중반부터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하여 5월 초에는 2천 590만 명으로 정점에 이르렀다. 7월 11일로 끝나는 주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 수는 1천 620만 명으로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사상 최고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 수치에는 자영업자나 경제활동인구에 새로 진입하는 이들처럼 실직하더라도 통상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는 이들은 포함되지 않는다. 때문에 이러한 실업급여 수급자 개념은 가구조사에서 측정되는 개념과는 다르다.

캘리포니아 주정부에 대한 실업보험 청구 내역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16~23세 임금근

[그림 1] 2019년 6월~2020년 7월 미국의 실업보험 수급자 수



주: 위 수치에는 일자리 나누기 프로그램 참가자가 제외되어 있으며 또한 통상적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으며 상당수의 자영업자가 포함되어 있는 대유행 실업부조(PUA) 수급자도 제외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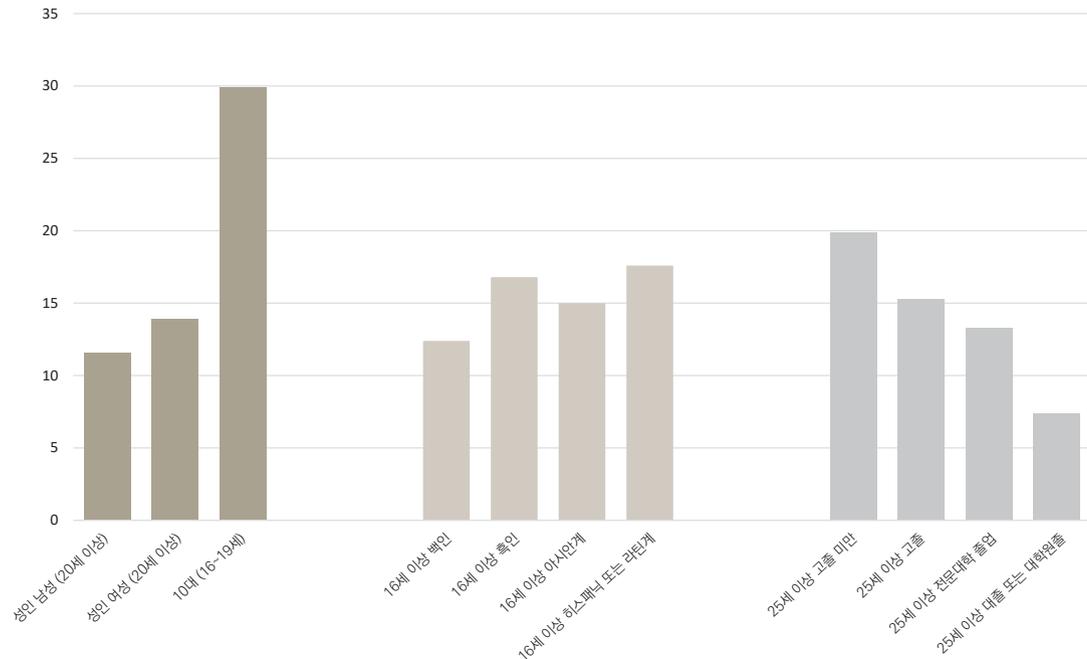
자료: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행정자료[U.S. Department of Labor(Dol), (2020.7.30)].

로자(wage and salary workers)의 1/3과 24~39세 임금근로자의 1/4이 실업급여를 신청하였다(Thomas J. et al., 2020). 특히 놀라운 사실은 캘리포니아에서는 대학교육을 받지 않은 근로자의 절반 가까이가 현 위기 동안 실업급여를 신청하였다는 점이다.

급격한 실업 증가를 그대로 반영하듯, BLS의 고용주 설문조사 수치들은 임금노동력 (payroll employment)이 3월과 4월 사이에 2천 80만 명이 감소했음을 보여준다(BLS, 2020). 5월과 6월에는 비농업부문 임금노동력이 각각 270만 명, 480만 명 증가하였으며, 이로써 3~4월에 소멸된 일자리의 약 36%가 복구된 셈이다. 실직(Job loss)은 모든 산업부문에 걸쳐 광범위하게 나타났지만, 특히 여가 및 숙박산업(leisure and hospitality), 교육 및 보건, 전문직 및 사업서비스(특히 인력파견업체), 소매업에서 크게 나타났다. 음식점이 포함되는 여가 및 숙박산업은 3월과 4월 사이에 거의 절반인 770만 개의 일자리가 감소하였으며, 4월과

그림 2] 연령, 성별, 인종, 민족, 학력별 실업률(2020년 5월 기준)

(단위 : %)



자료 : BLS, 상시인구조사(Current Population Survey).

6월 사이에는 감소된 일자리 중에서 350만 개가 복구되었다.

현 위기로 인해 가장 크게 타격을 받은 산업부문의 고용 구성을 보여주는 자료에 의하면, 청년·소수집단·저학력자가 특히 높은 실업률을 기록하였다(그림 2 참조). 예컨대, 5월 기준 10대의 실업률은 29.9%로 나타났으며, 이는 성인 여성의 약 13.9% 및 성인 남성의 11.6%와 크게 비교된다. 또한 실업률은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급격히 감소했다.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5월 기준 25세 이상 고졸 미만 학력자의 실업률은 19.9%였는데, 이에 비해 대졸자의 실업률은 7.4%였다.

실직에 더하여, 사용자가 겪은 자금압박으로 인한 근로시간 단축 또는 임금삭감 때문에 많은 이들의 소득도 감소하였다. 미국 인구조사국(US Census Bureau)의 최근 자료에 의하면, 6월 9일로 끝나는 주에서 조사 대상자의 거의 절반은 3월 13일 이후 본인 또는 그들의 가구 내 다른 구성원의 고용소득(employment income)에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답변하였다(U.S. Census Bureau, 2020). 그러한 수치는 18~24세, 히스패닉(Hispanics), 고졸 미만 학력집단의 경우 약 60%로 나타났다.

■ 채택된 조치들의 방향성과 목표 대상

3월 말에 입법화된 「코로나바이러스 원조·구호·경제안정법(Corona 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Act, 이하 CARES법)」은 대유행(pandemic)이 근로자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한 여러 중요한 조치들을 담고 있다. 「CARES법」은 기업의 고용비용 절감을 위한 정책방안으로서 기업에 급여세제혜택(payroll tax credit)을 제공하고, 근로자들을 일시해고(lay off)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상환면제가능대출(forgivable loans)을 중소기업에 제공하는 프로그램[급여보호 프로그램(Paycheck Protection Program)]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이 법은 현 위기 동안 실업보험에 대해 연방 차원에서 실질적 지원을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실업보험제도는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한다. 연방정부는 실업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주정부에 제공한다. 한편 실직자에

게 지급되는 급여는 통상적으로 해당 주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경험요율(experience-rated)에 근거하여 부과한 세금으로 마련된 주정부의 신탁기금(state trust funds)에서 지급된다. 「CARES법」에 따라 실업급여 최장 수급기간이 13주 더 연장되었으며, 연방정부는 이러한 연장급여(extended benefits)를 주정부에 지급한다. 또한 신규 채용 건이 매우 적은 이러한 시기에 다수의 주의 경우 실업급여가 실직자와 그 가족들을 부양하기에는 너무 낮다는 우려에 따라, 연방정부는 주당 600달러(약 70만 원)의 보충실업급여(supplemental unemployment insurance benefit)를 제공하고 있다.

「CARES법」은 통상적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는 일부 집단—주로 자영업자(독립계약자 및 프리랜서 종사자 포함)—에게도 급여를 제공한다. 연방정부는 이러한 집단에 지급된 모든 실업급여에 대해 주정부에 자금을 지급한다.

또한 「CARES법」은 경기 침체기에 단시간보상제도(short-time compensation, 이하 STC) 또는 일자리 나누기(work sharing) 프로그램의 활용을 장려하기 위한 여러 조항을 담고 있다. 경기 침체기 초반에는 미국 전체 노동력의 약 70%에 해당하는 26개 주만이 일자리 나누기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이 법은 현재 일자리 나누기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고 있는 주들이 그러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올해 말까지 연방정부는 주정부가 지급한 모든 STC 급여를 주정부에 지급해 줄 것이다. 이는 정규 실업급여가 많이 지급되면서 빠르게 소진되어 가는 주정부의 실업보험 신탁기금이 STC의 실시로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며, 사용자들도 일시해고 대신 일자리 나누기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향후 더 높은 실업세(unemployment taxes)가 부과되는 일이 없을 것임을 의미한다. 이미 실업률이 높은 수준에 이른 상황임을 감안하면, 사용자들이 일자리 나누기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강제휴직 처리된 근로자(furloughed worker)들을 직장으로 다시 데려오고, 심지어 새로운 근로자를 채용할 수도 있다는 점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일자리 나누기 프로그램 참가자는 근로시간 단축 비율에 관계없이 자신의 실업급여에 대해 주당 600달러의 연방정부 추가보조금(federal supplement)을 정액으로 지급 받는다. 이와 같이 관대한 수준의 STC 급여는 분명 근로자들에게 일자리 나누기 프로그램의 매력도를 높이는 요소가 된다.

일시해고를 당하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에도 코로나19 위기와 관련된 다른 이유들로 근무가 불가능할 수 있다. 근로자 본인이 코로나19에 감염될 수도 있고 감염된 가족을 돌봐야 할

수도 있다. 또한 대부분의 학교와 육아시설이 문을 닫은 상황이며, 이를 대체할 육아 방안을 마련할 여력이 없는 근로자들도 많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대응책으로 3월에 「가족우선 코로나 대응법(Families First Coronavirus Response Act)」이 제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중소기업들은 코로나19 발병과 관련된 사유로 결근할 수밖에 없는 근로자들에게 (임금 전액이 지급되는 최장 2주의) 유급 병가(paid sick leave) 및 (정규 임금의 2/3가 지급되는 최장 10주의) 유급 가족의료휴가(paid family and medical leave)를 부여해야 할 의무가 있다. 대부분의 대기업이 유급 병가와 유급 가족의료휴가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 법은 근로자 500인 이상 기업에 대해서는 적용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으며, 일부에서는 이러한 누락이 적용범위에 있어 중대한 공백(gap)에 해당한다고 주장해 왔다(The Washington Post, 2020).

■ 기업 지원을 위한 즉각적인 유동성

중소기업이 급여보호 프로그램으로 대출을 받고 자사 근로자 전체의 고용을 유지할 경우, 해당 대출은 탕감(forgiven)된다. 최초 법에서는 대출금의 75% 이상을 직원 보수로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으나, 이 비중은 이후 60%로 낮아졌다. 이 프로그램은 매우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2주도 되기 전에 최초 배정액인 3천 490억 달러(약 404조 원)가 모두 소진되었다. 미 하원은 이 자금에 추가로 3천 100억 달러(약 360조 원)를 배정하였다. 급여보호 프로그램에 의한 대출은 근로자 500인 이하 기업들만 이용할 수 있다.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은 민간 대출기관을 통해 관리되는 이러한 대출을 신청하는 데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조직들이 더 유리한 조건들을 갖추고 있으며, 따라서 규모가 작은 기업들은 이러한 자금을 받는 기업들 사이에서 과소대표(underrepresented) 되어 있다는 점이다.

또한 연방정부는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매입함으로써 중견기업과 대기업에 유동성 공급을 지원해 오고 있다. 대기업에 대해서는 연방정부가 [최대 7천 500억 달러(약 869조 원)]의 회사채를 직접 매입하고,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은행으로부터 [최대 6천억 달러(약 695조 원)]의 기업대출을 매입하여 왔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독립계약자, 프리랜서 및 기타 자영업자들은 연방정부 차원에

서 특별히 기금이 마련된 프로그램을 통해 실업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대유행 실업부조 (Pandemic Unemployment Assistance: PUA)라 불리는 이러한 신설 프로그램이 50개 주에 모두 개설되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었지만, 최근 몇 개월 동안 PUA를 통해—대부분은 아니더라도 상당수가 자영업자들에 의해—많은 수의 실업급여 신청 건이 접수되었다. 7월 4일로 끝나는 주의 경우, 미국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실업급여를 받는 3천 180만 명의 수급자 중 40% 이상이 PUA를 통해 자금을 지원받았다.

■ 종속적 근로자에 대한 지원

앞에서 약속한 바와 같이, 실직한 종속적 근로자(즉, 피고용인)에 대한 주요 정책은 주정부가 운영하는 실업보험제도를 통한 소득 지원이며, 연방정부의 급여가 보충적으로 지급되었다. 대유행이 확산되던 초기 몇 주 동안에는 각 주마다 신청자들이 급증하면서 신청 건에 대한 처리가 지연되었다. 상황은 주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주정부 실업보험기관들은 신규 직원을 고용하여 훈련시켰으며, 현재는 신청 건에 대한 처리 상황이 개선되었다. 실업급여를 받는 종속적 근로자의 비중으로 정의되는 실업보험 적용 종속적 근로자 실업률(insured employment rate for dependent workers)은 5월 이후 크게 감소하고 있지만, 7월 4일로 끝나는 주에서는 여전히 높은 수치(11.1%)를 기록하였다.

주정부의 실업급여에 대한 연방정부의 추가보조금은 청구 처리속도를 높이기 위해 (7월 말까지 주당 600달러의) 정액으로 책정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추가보조금으로 인하여 중간 및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매우 관대한 수준의 급여가 제공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의 실업보험 행정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실업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의 임금대체율은 140%이며 이는 실업급여를 받는 근로자의 절반 이상이 취업 당시보다 소득이 훨씬 더 많음을 의미한다(Thomas J. et al., 2020). 이러한 증거와 일관된 결과로서 미국 전역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연방정부의 보충급여 지급으로 인해 미국의 중위(median) 실업급여 대체율이 134%가 되었다고 추산하며, 따라서 실업보험 수급자격이 있는 근로자의 2/3는 취업 상태일 때보다 실업 상태일 때 소득이 더 많을 수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또한 근로자들을 일자리로

복귀시키기가 어렵다고 호소하는 사용자들의 보고도 많아지고 있다. 원칙적으로는 근로자가 일자리 제안을 거절하거나 이전 직장으로부터 복귀 요청을 받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잃게 되지만, 이러한 규칙은 경제위기 시에는 집행하기 어려울 수 있다.

현재까지 일자리 나누기 프로그램의 활용 정도는 역사적 기준으로 보면 높은 편이지만, 실제로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근로자의 2% 미만만이 일자리 나누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은 크게 줄어들었는데, 신규 채용 건이 상대적으로 매우 적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일자리서비스센터(job service center)들이 보건상 위험을 이유로 문을 닫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미시간에서는 일자리서비스센터에서 일하던 일부 근로자들이 실업보험 청구처리 업무 및 일자리 나누기 프로그램 개설 업무를 지원하도록 재배치된 상태이다.

■ 근로조건과 작업조직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도 원격근무(remote work)가 가능한 경우라면 — 주로 사무직 근로자들 — 어디에서나 모두 원격근무가 크게 증가하였다. 미국 통계기관들은 아직까지 코로나19 위기가 시작된 이후 원격근무 발생률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한 바는 없지만, 민간에서 실시한 여러 조사들은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여 왔다. 갤럽(Gallup)의 보고에 의하면, 4월 중순 갤럽의 패널조사에 응답한 취업자 중 62%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 때문에 재택근무를 하고 있다고 답하였으며, 이는 3월 중순의 31%에 비해 증가한 수치이다 (Adam and Lydia, 2000). MIT와 업워크(Upwork)의 연구원들이 4월 초에 실시한 구글 소비자조사(Google Consumer Survey)도 이와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는데, 조사 직전 4주 동안 취업 상태였고 조사 당시에도 여전히 취업 중이었던 응답자 중 약 55%는 원격근무를 하고 있었으며, 응답자의 38%(즉, 조사 당시 원격근무 중이었던 근로자의 69%)는 직전 4주 중에 원격근무로 전환하였다(Erik et al., 2020).

미국에서는 코로나19의 확산방지를 위해 어떠한 기업들이 휴업을 해야 하고, 그러한 기업들이 언제 업무를 재개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질병의 확산방지 및 근로자 보호를 위해 어떠한 작업장 관행을 채택해야 하는지에 대한 국가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대신, 이러한 결정들

은 50개 주의 각 주지사가 내려야 했으며, 많은 경우에 개별 기업들은 근로자 보호를 위해 더 규제적인 관행들을 채택하였다. 예컨대 소매점 출입자 수를 제한하거나, 개방된 장소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서로 6피트(약 183cm) 이상 거리를 두어야 한다든가, 근로자들이 작업장에 들어가기 전에 매일 의무적으로 건강상태를 체크해야 하는 것 등이 규제에 포함되어 있다.

5월 이후 모든 주에서 영업 개시에 대한 규제를 크게 완화하기는 했지만, 유수의 기술기업(tech companies)을 포함한 많은 기업은 가능한 경우 자사 근로자들이 원격근무를 계속하도록 하고 있다(CNN Business 1, 2020). 예를 들어, 구글,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사 근로자 중 상당수가 2020년 말까지 재택근무가 가능하다고 발표하였다.

일부 기업들은 근로자에게 더 안전한 작업장을 제공하기 위해 작업장을 재설계하였다. 예컨대, 근로자들을 고객이나 타 근로자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많은 매장과 공장에 차단 유리벽(plexiglass barrier)이 설치되었다(CNN Business 2, 2020). 근로자들이 비좁은 공간에서 일하는 육류포장 시설을 비롯한 일부 업체들은 코로나19가 근로자들 사이에서 발병됨에 따라 강제 폐쇄되기도 하였다.

■ 신규 노동시장 진입자

대학생은 일반적으로 5월에, 고등학생은 6월에 졸업한다. 신규 졸업자들의 노동시장 상황은 매우 열악하지만, 현재까지 노동시장 정책은 노동시장 신규 진입자보다는 실직자들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어왔다.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10대의 실업률(고등학교 졸업자 포함)은 5월 중순 기준으로 30%에 육박하였으며, 이는 신규 노동시장 진입자들이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음을 시사한다.

■ 정책 혁신과 노동시장 동향

사실상 모든 주의 주지사들은 3월과 4월에 의무휴업을 시행하였고, 이후에는 대체로 규제를

완화하면서 모두는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기업에 영업 재개를 허용하였다. 영업 재개에 대한 접근방식과 그 시기는 주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었는데, 그러한 과정을 관리하는 통일된 국가정책이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가 코로나19 동향에서의 지역별 차이와 항상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다. 최근에는 미국 일부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다시 급증하면서, 주별로 술집과 같은 일부 업체에 대해 의무휴업 조치를 다시 취하고 있다.

최근 미국에서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급증하면서 경제회복 가능성이 매우 불확실해졌다. 하지만 현재의 코로나 사태가 잠잠해진다면 하더라도 많은 기업들이 백신이나 효과적인 치료제가 개발되기 전까지는 생산능력을 최대한으로 가동하기 힘들 것이며, 미국 의회예산처(Congressional Budget Office)는 2021년까지 실업률이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Phill Swagel, 2020).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연방정부는 강제휴직 처리된 근로자들을 재고용하기 위해 사용자들이 일자리 나누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Katharine G. and Susan N., 2020). 이 프로그램은 실업률을 현저히 낮추고 근로자들을 일자리로 다시 복귀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더구나 「CARES법」은 주정부가 일자리 나누기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사용자 및 기업이 이 프로그램을 활용하도록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즉, 연방정부는 2020년까지 모든 STC 급여에 대해 비용을 지급할 것이며, 이에 따라 사용자가 일시해고 대신 STC를 활용할 경우 주정부의 실업보험 신탁기금은 고갈되지 않고 사용자의 실업보험세율도 인상되지 않을 것이다. STC에 참여한 근로자들은 실업보험 수당에 대해 연방정부의 추가보조금을 관대한 수준으로 받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은 근로자들에게도 매력적인 방안이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민간부문과 함께 사용자 지위에 있는 정부들(government employers)도 STC에 큰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보도되어 왔지만, 매주 발표되는 실업보험 보고서에 의하면 STC의 활용도는 여전히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활용도가 낮은 것은 사용자들이 이 프로그램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다. 이전 연구결과에 의하면, STC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주에서도 이러한 선택방안(option)을 알고 있는 사용자는 비교적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같은 정보 부족은 이 프로그램의 활용에 큰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Susan Houseman et al., 2017). 또한, 일자리 나누기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과정에서는 사용자들이 더 많이 관여하게 된다. 개인들의 정규 실업급여 청구에 대한 실업보험기관들의 처리가 지연

되어 온 것과 마찬가지로, 주정부 기관들도 일자리 나누기 프로그램에 대한 사용자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다룰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였다. 예컨대, 미시간에서는 해당 주정부 기관이 이러한 관심사를 다루기 위해 인력을 보강했는데, 이러한 대응방안은 다른 주에서도 마련될 가능성이 크다. 일자리 나누기 프로그램을 활용하도록 하는 금전적 인센티브가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수개월 내에 이 프로그램의 활용도는 크게 증가할 수 있다. 또한 현 위기 동안 주정부 실업보험기관 직원들의 업무량이 크게 늘면서 STC 프로그램 활용 정도에 대한 업무보고가 지체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 차후 대책과 재정적 실행 가능성

미국은 정책적 기로에 서 있다.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경기침체에 접어든 지 4개월이 지난 현재, 실업률은 여전히 사상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급증하면서 미약한 경제회복 조짐마저 위협받고 있으며, 의회는 실업자들에 대한 구호강화, 기업에 대한 추가적인 유동성 공급 및 채용 확대를 위해 추가 입법을 논의하고 있다. 주당 정규 실업급여에 대해 연방보충급여(federal supplemental benefits)를 관대한 수준으로 지급하는 방안은 일시해고된 다수의 저임금 근로자들에게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데는 효과적이었지만, 이러한 급여는 7월 말을 기한으로 종료될 예정이다.¹⁾ 실업급여 수급자의 과반수가 취업 상태일 때보다 소득이 더 높다는 사실은 매우 큰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으며, 이러한 지급금—또는 연방정부의 추가보조금—이 7월 이후까지 연장될지 여부도 확실치 않다.

또 다른 주요 이슈는 각 주가 직면한 예산 문제이다. 적자 상태로 예산 운영이 가능한 연방 정부와 달리 주정부는 매년 예산 수지를 맞추어야 한다. 높은 실업률과 사업수익 감소는 주정부 예산이 크게 부족한 상황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한 경우 주정부는 서비스를 대폭 축소해야 하고, 이는 경제에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미칠 것이다. 지금까지 연방정부는 각 주에

1) 편집자 주: 이 글이 작성된 이후 시점인 지난 8월 8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연방보충급여를 연장하여 주당 400달러씩 지급한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하였고, 이에 대해 민주당은 대통령이 의회를 무시하고 예산을 사용하는 월권을 행사한다며 강하게 반발하였다.

제한적인 지원을 제공해 왔으며, 이러한 자금은 코로나19 문제 해결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지출에 사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각 주에 대한 연방정부의 추가적인 지원이 상당한 규모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요청이 이어지고 있다.

차기 입법의 새로운 중점 사항에는 인프라 사업에 대한 연방정부의 지출을 통해 고용을 늘리는 경기부양책이 포함될 수도 있을 것이다. 정책 상황은 유동적이지만, 보고된 내용에 의하면 입법과정에 있는 인프라 지출을 포함한 연방예산 지출안은 큰 규모—1조 달러에 근접하거나 심지어 이를 초과하는—일 것으로 예상된다. **KLI**

참고문헌

- Adam Hickman & Lydia Saad(2020.5.22), “Reviewing Remote Work in the U.S. Under COVID-19”, Gallup, <https://news.gallup.com/poll/311375/reviewing-remote-work-covid.aspx>
- CNN Business 1(2020.5.8), “Tech companies are letting employees work from home through 2020”, <https://edition.cnn.com/2020/05/08/tech/tech-companies-working-remotely-2020/index.html>
- CNN Business 2(2020.4.30), “GM and Ford lay out plans to restart their US factories”, <https://edition.cnn.com/2020/04/30/cars/gm-ford-plans-restart-us-factories/index.html>
- Erik Brynjolfsson, John Horton, Adam Ozimek, Daniel Rock, Garima Sharma, & Hong Yi Tu Ye(2020.4.8), “COVID-19 and Remote Work: An Early Look at US Data”, https://john-joseph-horton.com/papers/remote_work.pdf
- Katharine G. Abraham & Susan N. Houseman(2020.5.11), “Since Work Is Rare, It’s Time to Share: Laid-off employees can return part-time and receive benefits”, The Wall Street Journal, <https://www.wsj.com/articles/since-work-is-rare-its-time-to-share-11589235150>
- Phill Swagel(2020.4.24), “CBO’s Current Projections of Output, Employment, and Interest Rates and a Preliminary Look at Federal Deficits for 2020 and 2021”, CBO Blog, Congressional Budget Office, <https://www.cbo.gov/publication/56335#:~:text=The%20Labor%20Market,percent%20>

in%20the%20first%20quarter.&text=In%20particular%2C%20the%20unemployment%20rate,by%20the%20end%20of%202021

- Susan Houseman, Christopher J. O'Leary, Katharine G. Abraham, Frank Bennici, & Susan Labin(2017.6.28), "Demonstration and Evaluation of the Short-Time Compensation Program in Iowa and Oregon: Final Report", W.E. Upjohn Institute for Employment Research.
- The Washington Post(2020.3.17), "Paid sick leave: Who gets it during the coronavirus outbreak", <https://www.washingtonpost.com/business/2020/03/16/paid-sick-leave-coronavirus-house-bill>
- Thomas J. Hedin, Geoffery Schnorr & Till Von Wachter(2020.5.22), "An Analysis of Unemployment Insurance Claims in California During the COVID-19 Pandemic", Policy Brief, California Policy Lab, <https://www.capolicylab.org/wp-content/uploads/2020/07/July-2nd-Analysis-of-UI-Claims-in-California-During-the-COVID-19-Pandemic.pdf>
- Tim Bartik(2020.6.1), "Automatic Stabilizers and Federal Aid to States", Reserch Highlights, W.E. Upjohn Institute for Employment Research, <https://www.upjohn.org/research-highlights/automatic-stabilizers-and-federal-aid-states>
-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BLS)(2020.7.2), "The Employment Situation-June 2020", News Release, <https://www.bls.gov/news.release/pdf/empsit.pdf>
- U.S. Census Bureau(2020.6.17), "Week 6 Household Pulse Survey: June 4 - June 9", <https://www.census.gov/data/tables/2020/demo/hhp/hhp6.html#tables>
- U.S. Department of Labor(DOL)(2020.7.30), "COVID-19 Impact", News Release, <https://www.dol.gov/ui/data.pdf>